

데스크시각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거목’(巨木)의 영면(永眠)은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깨닫게 한다. 지난 25일 별세한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초일류 기업으로 일궈낸 성공의 이면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등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그가 한국 경제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가 이른 ‘신화’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비전에서 출발했다. 197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에서의 반도체 사업은 사업성 자체가 의심받을 정도로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도전에서 비전을 현실화했고, 결국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1972년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간 영국에서 차관을 들여와, 미포만의 모래사장에 조선소를 건립한 것과 종종 비교되기도 한다.

이 회장은 시대의 고비마다 적절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경제

‘한국판 뉴딜’ 광주·전남 미래 좌우한다

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마누리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1993년),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 수준이다.”(1995년),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은 대부분 사라진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리 시간이 없다”(2010년),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창조 경영을 완성해야 한다.”(2013년) 이 같은 이회장의 어록에는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과감한 변화와 적극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혁신적 리더십이 담겨 있다. 삼성이 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다.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로

이 회장의 선제적 위기 진단과 명확한 메시지를 통한 비전 제시는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도 깊은 울림을 던진다. 정치·경제·행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좀처럼 미래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는 광주·전남의 상황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지역 인건비는 지난 총선에서 세력 및 세대 교체를 단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전체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초·재선이 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 지역 정치권이 시대의 중심에서 서서 미래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

결국 과감한 도전과 적극적 응전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결집과 연대를

통해 미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지역을 넘어선 시대적 여젠다를 선점해야 한다. 또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에서도 과감한 인재 발굴을 통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 정치적 리더 배출과 함께 호남이 다시 민주 진영의 심장으로서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와 미래에 대한 각성과 강력한 연대가 요구된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광역단체장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가 앞장서야 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행정 통합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통 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고 미래의 길을 내야 한다. 상생의 틀에서 미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호남은 영남에 이어 충청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끝내 시대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말 것이다.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같은 한계를 거론하는 목소리를 아끼게 들어야 한다. 시대와 소통하는 미래 지향적 리더십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에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들어 다닐 대목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까지 예산만 160조 원이다. 특히 지역 균형 뉴딜 분야에는 전

체의 절반가량인 75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광주·전남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낙후했다는 점을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절호의 기회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 디지털 뉴딜은 광주에, 그린 뉴딜은 전남 지역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정치적 환경도 나쁘지 않다. 호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은 그동안 이미 증명되어 왔다. 게다가 여당의 이낙연 대표(영광)와 김태연 원내대표(순천)는 지역 출신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 대한 정치적 비중도 커지고 있다.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를 넘어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낙후된 호남의 발전을 위해 땀과 땀이 주려 해도 지역에서 제대로 된 ‘그림’(사업 계획)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탄식했던 그 전철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 전영이 시작됐다. 시간은 많지 않고 기회는 쉽게 잡혀오지 않는다. 지역 역량의 결집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은펜칼럼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의 발언 읽기

-다름을 존중하면서 같음을 찾아보자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주제가 아닌, 일상적 삶과 지역 문제에 대한 우리 동네의 둔감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통합이 옳든 그르든 적어도 논의는 진척 시작했어야 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시도 통합을 할 경우 전남의 소규모 학교 문제 등 교육 행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도 공무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말을 꺼내니 시작하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시도 통합이란 이렇게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많은 연구와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통합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먼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영남 지역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영남 지역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가 통합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용섭 시장의 통합 제안이 늦었지만 다행인 이유이다.

김영록 지사는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민선 8기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당연한 주장이다. 통합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2022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완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부·울·경과 같은 메가시티 단계도 언급했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메가시티 단계는 행정 통합을 위한 예방연습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되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김 지사는 시도 통합을 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지역 자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공약했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국가적 여젠다와 상통한다.

그러나 김영록 지사의 발언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전라북도까지 포함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그렇다. 전라북도는 역사적·정치적으로는 광주·전남과 같은 운명체였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니다. 전라북도는 순창군이나 고창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리적으로 광주·전남과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기 어렵다. 전북까지를 포함한 메가시티 주장은 통합 논의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북과 광주·전남은 따로따로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제 호남권 전

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큰 규모의 행정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3800만 명이나 되지만 와이오밍(Wyoming)주 인구는 56만 명밖에 안 된다. 또 다른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바이에른주 인구는 1600여만 명이지만 브레멘주는 60여만 명에 불과하다. 통합 논의를 하면서 규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통합의 근본 목적을 잃을 수 있다.

나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발언에서 통합의 로드맵을 발견했다. 즉 두 사람의 발언을 합하면 통합의 그림이 그려진다. 두 사람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두 사람의 발언을 같듯이 아닌 통합을 위한 생산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유이다. 두 자치단체장이 지금의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 통합 논의에서 꼭 생산적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최종 주인공들이 시도민들의 자제이다. 우리 모두 다름을 존중하면서 같음을 찾으려 노력하자!



최영대  
전남대 명예교수

시도 통합을 둘러싼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양자가 회동을 통해 합의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시도 통합 물 건너갔다” “시도 간 갈등만 키웠다”면서 부정적 논평을 한다. 과연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발언에서 다름은 무엇이고 같음은 무엇인가?

대구·경북은 이미 2022년을 목표로 시도 간 행정 통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조광억 도시) 구상을 발표했다. 저런 주장의 구상을 발표하려면 준비 기간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서는 정치권은 물론이요 학계, 시민사회, 언론 모두 통합에 관한 어떤 특별한

기고

뉴 노멀 시대의 물 관리 정책

강뎀 유역은 341mm로 500년 빈도를 초과할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을 기후 변화로 인한 뉴 노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異常) 기후로 치부하는 순간 올해와 같은 피해는 반복될 것이고, 국민의 물 안전과 국가의 물 관리 경쟁력도 도태될 것은 자명하다.

급변 홍수 피해의 잘잘못은 범정부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돼야 할 것이며, 필자는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물 관리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천 관리를 일원화해 물 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지난 2018년 6월에 물 관리 일원화가 시행됐음에도 하천에 흐르는 물의 수량과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물이 흘러가는 통로인 하천 시설의 관리는 아직 국토부에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방류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예방과 복구 조치는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조직

과 예산 체계는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고 재난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둘째, 물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후 변화와 함께 뉴 노멀 시대를 대표한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드론 등을 융합 활용할 때 인간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놓치기 쉬운 물 관리의 취약 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댐과 하천 제방 등 유역 전체에 걸쳐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예방적 치수 정책이라고 본다.

셋째, 현실의 수요에 맞도록 물 관리위원회 역할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물 관리 일원화를 시행했고 2019년 8월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물 관리위원회

는 이수·치수·수질·수생태계 등 물 관련 전문가 외에도 갈등 관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또한 물 관리의 협치와 분쟁 조정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나, 새롭게 변화되는 기후 환경과 디지털로 진화하는 물 관리 기술의 수준과 수요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계와 연구소, 기업 등 민간 위원들의 전문적 지식이 잘 반영돼 물 관리위원회의 역할도 현실의 수요에 맞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홍수 등 기후 위기가 뉴 노멀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국민의 물 안전을 지키고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고도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천 관리를 일원화하고, 물 관리 디지털화를 완성하며, 물 관리위원회 기능을 전문화하는 뉴 노멀 시대의 물 관리 정책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시급하다.

社說

소상공인·벤처 자금 지역 지원 비율 높여야

소상공인과 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는 최근 수년간 해마다 감소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총 2129억 원의 소상공인 성장기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원금 4조 7800억 원 중 4.5%에 불과한 것으로, 세종·제주·울산·강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규모다. 반면 경기도는 전체의 24.5%(1조 1724억 원)를 지원받았고, 인천도 8.8%(4205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 지역 지원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 4.8%, 4.6%, 4.4%, 4.3%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성장기반자금은 5년 이상

된 도약기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이다. 하지만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로 인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신성장 기업과 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조성하는 모태 펀드의 광주·전남 지역 투자율도 지난 10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는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1082억 원을 투자받아 전체 투자액 13조 5782억 원의 0.8%에 불과했고, 전남은 727억 원으로 0.5%에 그쳤다.

이들 통계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벤처 기업 지원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이제라도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상권 보호와 벤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 대폭 확대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 시설을 현대화하고 마을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맞춤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셈이다.

전체 총사업비는 3조135억 원인데, 사업 대상지별로 수십·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로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문제는 전국에 걸친 2170개의 어촌·어항 가운데 단 300곳만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의 어촌에서 대상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투명 터져서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기존 300개소에서 1000개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

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7월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최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어촌의 13.8%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를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남의 어촌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상시 접안이 불가능한 선착장이 대다수이다. 태풍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해도 피할할 곳이 없어 100km 이상 순항하는 경우도 잦은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 대상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은 갈수록 더 낙후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상생’(相生)은 두 가지 또는 여럿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요즘 지역 언론에서도 ‘상생’이라는 단어는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광주·전남 상생’이 바로 그것이다. 광주와 전남은 애초 한 뿌리라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여 그동안 줄곧 상생 협력의 길을 걸어왔다. 민선 6기에는 광주·전남 상생 협력의 구상점이 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양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도 했다. 앞서 2007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 큰 양보로 나주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세워지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최근 민선 7기 들어 광주·전남의 상생 정신은 완전히 사라진 듯한 분위기다. 역사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 뿌리임에도, 양 지역 수장(首長)들의 만남은 마치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이용섭 광주 시장이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엔 되레 ‘상생’이 더 어려워지는 듯 하다. 김영록 지사의 단계적 행정통합 논의를 이 시장이 받아들여면서 잠시 통합 논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이 시장은 모든 것을 김 지사에게 일임하고 한달 넘게 만남을 원했지만, 이마저도 번번히 거절당했다.

두 수장은 지금도 냉랭한 분위기다. 수시로 만나 상의하고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사·도 상생은 더더욱 흘러가고 있다. 시도 간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광주·전남 간 공항화 이전 문제부터 광주시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생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은 시도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양 시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군공항 이전 없는 민간공항 이전은 안 된다. 어른이 광주에서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의 입장과 함께 지역의 귀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라는 점에서 양보와 협력이 절실한 때다. 무엇보다도 양 시도 수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남은 민선 7기 ‘광주·전남 상생’에 또 한 번 제대로 시동을 걸었으면 한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박동희  
전북대학교 바이오융합과학과 교수

인터넷과 휴대폰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놀라움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회를 잡은 기업들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도태돼 사라지고 있다. 즉,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하고 적응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 따라 생존과 번영이 결정된 것이다.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로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는데 응답률 유역의 경우는 378mm로 200년 빈도를, 섬진